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BTF 푸른나무재단

본 정책 제안서의 주요 통계는 다음의 BTF푸른나무재단 자체 조사에 근거합니다.

- 학생 실태조사(학생 대상, 2025.11.03.~2025.12.31.) : 8,476명
- 학부모 인식조사(학부모 대상, 2026.01.26.~2026.02.05.) : 521명
- 지방선거 정책 의견 수렴 조사(학생·교사·전문가 대상, 2026.03.09.~2026.03.20.) :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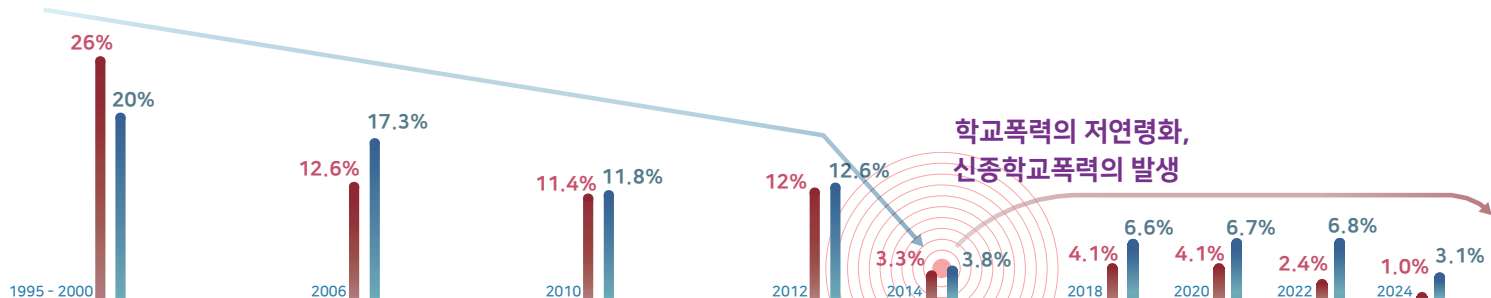
BTF푸른나무재단 소개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내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 그리고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순수 비영리공익법인(NGO)입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의 노력과 성과

학교폭력 가해율
학교폭력 피해율



출처: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

30년 간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은 침묵과 방관 속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BTF 푸른나무재단

본 정책 제안서의 주요 통계는 다음의 BTF푸른나무재단 자체 조사에 근거합니다.

- 학생 실태조사(학생 대상, 2025.11.03.~2025.12.31.) : 8,476명
- 학부모 인식조사(학부모 대상, 2026.01.26.~2026.02.05.) : 521명
- 지방선거 정책 의견 수렴 조사(학생·교사·전문가 대상, 2026.03.09.~2026.03.20.) : 303명

BTF푸른나무재단은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요청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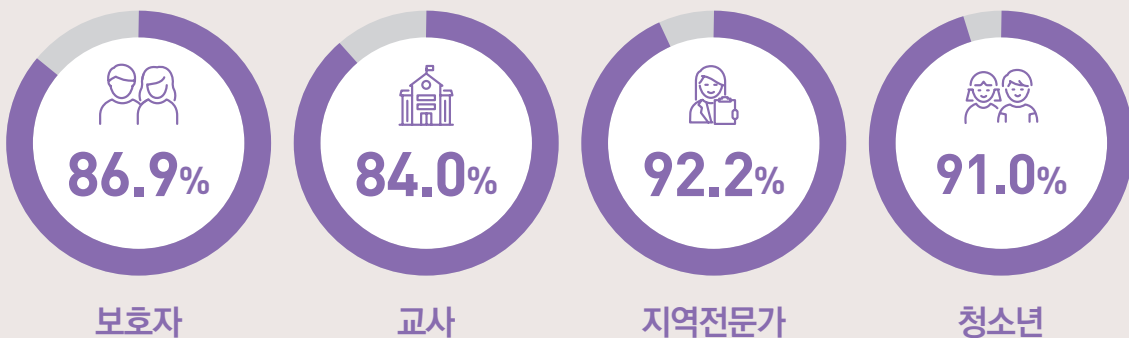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의 학교폭력은 마음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며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폭력과 갈등은 온라인 공간과 일상으로 이어지고, 제때 보호받지 못한 상처는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학교폭력과 교권 보호 및 침해, 보호자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체계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통쾌한 응징이 아니라, 갈등이 더 큰 폭력과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개입하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대응은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안에서 예방하고 보호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이 지역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가정, 지역기관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협력체계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시민들은 학교폭력 대응 정책을 중요하게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폭력 관련 공약을 중요하게 보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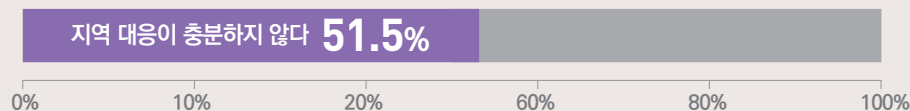


BTF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26 학교폭력 정책 의견 수렴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학교폭력 관련 공약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보호자 86.9%, 교사 84.0%, 지역지역 전문가 92.2%, 청소년 91.0%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정책이 지역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복지와 안전, 교육의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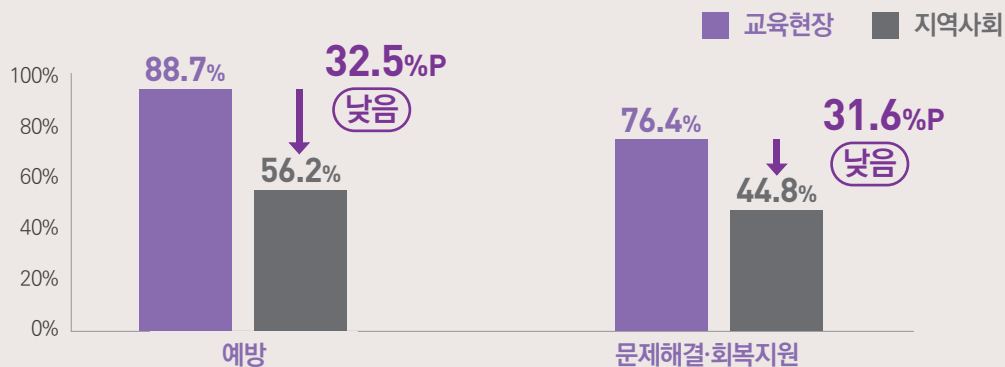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대응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충분하지 않다” 51.5%



BTF푸른나무재단이 수행한 ‘2026 학교폭력 학부모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교 폭력 대응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은 51.5%**로, **충분하다는 응답 30.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개별 학교를 넘어 지역 안에서 예방, 보호, 상담, 회복 지원이 연결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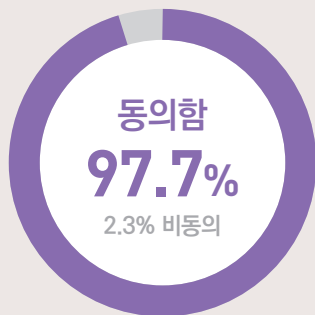


또한 BTF푸른나무재단 ‘2026 학교폭력 정책 의견 수렴조사’ 결과, 교사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지원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교육현장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이 있다고 본 비율은 56.2%, 문제해결·회복지원에 관심이 있다고 본 비율은 44.8%에 그쳤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과제가 아님에도, 시민들이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함께 책임지고 있다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학교와 지역을 잇는 협력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이며, 그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역할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책임 있게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대응을 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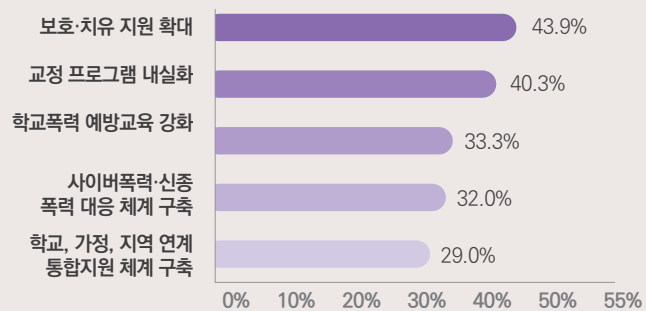
보호자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전문가/청소년

시민의 지역 학교폭력대책
우선과제 요구 현황



BTF ‘2026 학교폭력 학부모인식조사’ 결과,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97.7%가 동의했습니다. 또한 교사·지역 전문가·청소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가해학생 교육·상담 내실화, 예방교육 강화, 사이버폭력 대응체계 구축, 학교·가정·지역 연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학교폭력 대응을 학교 안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지역의 책임으로 세우는 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께
다음과 같은 3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대응이 작동하는
지역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BTF푸른나무재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3대 정책 제안

학교폭력 대응이 작동하는 지역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호와 회복이 없으면 그 부담은 지역의 복지·의료·안전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5년 피해 응답률은 2.5%로, 2013년 이후 전수조사 기준 최고치 기록¹⁾
 - BTF 2026 학부모인식조사 결과 보호자 51.5%²⁾는 우리 지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97.7%는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에 동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이하 동일, 생략)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②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

①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정비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대응을 지자체 공적 책임으로 명시한 예방·보호·회복·기관 협력 기반의 지역 맞춤형 조례 마련
- 학교 안 갈등의 지역사회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정·연계 원칙과 행정적 지원 근거 정비

②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전담 상담·신고체계 마련

- 학교 밖 접근 가능한 지역 단위 상담·신고 창구 마련 및 학교폭력·사이버폭력·디지털 성폭력 등 복합 피해 신속 대응
- 신고 이후 보호·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연속 연계되는 지역 기반 통합 대응체계 구축

③ AI 기반 학교·가정·지역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위기 신호 조기 포착 및 학교·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연계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반복 피해·가해·심리적 위기·가족 갈등 등 고위험 사안의 지역 전문기관 즉시 연계 및 회복 중심 지원체계 운영

1)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 BTF푸른나무재단 2026 학교폭력 학부모인식조사

2

BTF푸른나무재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3대 정책 제안

지역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 반복 피해·가해는 늘고, 신고 후 도움은 줄었습니다. 학교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대비 반복 피해 경험률 약 1.4배 증가, 반복 가해 경험률 역시 약 1.4배 증가³⁾
 - 피해 후 신고율·도움요청은 오히려 감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응답 크게 증가
 - 현장 우선 과제: 피해학생 보호·치유 지원 확대, 가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내실화
 - 피해학생 지원 거점, 재가해 방지 전문체계, 교사 개입 지원 등 지역 인프라 구축 시급
- 아동·청소년을 제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심하고 초기 개입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교사 86.0%가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응답⁴⁾
 - 교권 침해 유형 중 학생에 의한 폭행·상해 경험도 48.7%에 달해, 교사의 조기개입과 생활지도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필요

정책 제안

① 학교폭력 피해회복 전담지원센터 및 가해근절 특화지원센터 확충

- 피해학생·가족의 초기 보호·심리상담·치료 연계·학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피해전담지원센터 권역별 확충
- 반복 가해·충동성·공감 부족 등 재가해 위험요인을 집중 다루는 가해 특화지원센터 별도 마련

②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가정·학교·지역 연계 안전망 확대

- 학교폭력과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혼자 버티지 않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조기 발견·보호·지원 안전망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 현장체험학습 등 교실 밖 청소년활동의 안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관 연계 지원체계 마련

③ 교사의 안전한 개입을 보장하는 지역 협력 시스템 마련

- 교원의 조기 개입 이후 법률·심리·행정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
- 교사의 안전한 개입이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공동 책임 구조 구축

3) BTF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4) 동아일보, 「교사 86% "교권침해 당했거나 목격" ... 폭행·상해 경험도 절반 육박」, 2026.04.15

3

BTF푸른나무재단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3대 정책 제안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제안 배경

- 학교폭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지자체가 예방의 첫 번째 울타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 보호자, 관계회복 등 교육적 해결 우선 필요(86.3%), 2차 피해·보복 방지(98.7%), 목격학생 보호체계 마련 필요(98.8%)에 동의⁵⁾
 - 피해 후 쌍방 신고 경험은 23년 대비 약 1.3배 증가⁶⁾
 - 교사 체감 학교폭력 예방·회복 관심도는 교육현장보다 지역사회에서 현저히 낮음
 - 학교폭력 대응은 처벌·사안 종결 중심에서 관계회복·갈등 예방 중심으로 전환 필요

정책 제안

① 관계회복과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기반 조정·회복 지원체계 마련

- 학교 안 갈등의 보호자 갈등·지역사회 분쟁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조정·회복 체계 구축
- 관계회복·갈등완화·재발방지를 통합하는 조정·회복 지원 기능 강화

② 사이버폭력과 AI 기반 신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캠페인 확대

- 온라인게임, SNS, 메신저, AI·딥페이크 합성물 악용 등 변화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인식 제고 및 디지털 시민성·문화예술·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 청소년·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비폭력 디지털 문화 확산 캠페인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자체·학교·경찰·민간전문기관이 연계한 지역 기반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확대

③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비폭력 문화 확산

- 학교폭력을 지역사회 공동 과제로 인식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보호자 교육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확대
- 학교·청소년기관·지역사회 단체 연계 예방교육 및 비폭력 문화 확산 사업 추진

5) BTF푸른나무재단 2026 학교폭력 학부모인식조사

6) 위와 동일



BTF 푸른나무재단

청소년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BTF 3대 핵심활동



상담치유 청소년이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합니다.

- **심리상담**
전국학교폭력상담전화 1588-9128(구원의팔)
학교폭력 위기상담
- **긴급출동 및 통합지원**
사안대응, 회복지원(장학, 의료, 생활 등)
- **피해학생 전담지원 '위드위센터'**
상담, 학습지원(출석인정)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지원단 연수 및 117 신고센터 상담사 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지원
- **화해분쟁조정**
피·가해자 분쟁조정·관계회복·갈등코칭
- **장학지원**
대현장학사업



예방교육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푸른코끼리
사이좋은디지털세상
- **문화예술을 통한 예방교육**
아주사소한고백
위헬프
제로라운드
- **인성교육**
CEMD 인성교육 모델
청소년, 가족, 군 장병 인성교육
- **AI 활용 미래교육**
청소년 AI 인성교육 아이그로우
AI 창업 진로교육
AI 활용 사이버폭력 탐지기술 개발
- **학교폭력 예방&치유 전문가 양성**



사회변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연구활동

학교폭력문제연구소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2001년~현재)
연구도서 140여종 출간

·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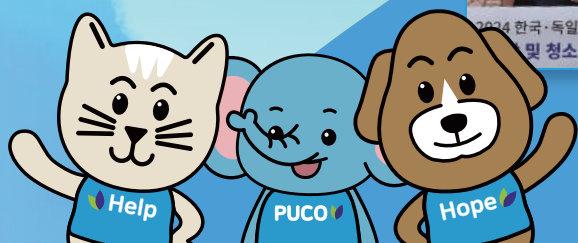
2004년 학폭법 제정(국회청원 서명 47만명)
20여회 동법률 개정 참여

· 국제활동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획득
UN글로벌컴팩트(UNGC) 가입
학교폭력연구 및 국제세미나 교류
(독일,바티칸,캐나다,일본,홍콩,필리핀,사우디 등)

· 캠페인

1995년 한국 최초 학교폭력 이슈 공론화
비폭력 지지서명 누적 564,137명



학교폭력예방에 나의 힘을 보태는 방법!

#청소년을 위해 후원하기



정기후원QR

학교폭력 피해 치유, 예방 교육,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 비폭력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후원해주세요.
소중한 후원금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푸른나무재단의 3대 주요활동에 사용됩니다.

#비폭력 지지서명



서명하기QR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비폭력문화를 지향하는 서명을 작성해주세요.
여러분의 메시지는 어려움에 처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로하고, 푸른나무재단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제안할 때 사용됩니다.

#푸른약속 캠페인



캠페인안내QR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인증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해시태그와 함께 비폭력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학교폭력예방 PARTNER



Tel. 02-585-0098

E-mail. jikim0098@btf.or.kr

Web. www.btf.or.kr

Address.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88 청예단빌딩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BTF 푸른나무재단

본 정책 제안서의 주요 통계는 다음의 BTF푸른나무재단 자체 조사에 근거합니다.

- 학생 실태조사(학생 대상, 2025.11.03.~2025.12.31.) : 8,476명
- 학부모 인식조사(학부모 대상, 2026.01.26.~2026.02.05.) : 521명
- 지방선거 정책 의견 수렴 조사(학생·교사·전문가 대상, 2026.03.09.~2026.03.20.) : 303명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